

‘五星紅旗’에서 ‘一星紅旗’로 - 중국 민족정책의 변용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시진핑 장기집권 개막식을 뒤덮은 것은 진홍색 ‘中華民族主義’ 깃발이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총서기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하고 이를 자축하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장기집권에 대한 빗장은 몇 년 전에 이미 활짝 열렸기에 이번 대회는 단지 모택동, 등소평에 이은 시진핑의 제3의 장기집권을 내외에 선포하는 한마당 잔치에 불과했다. 이 대회의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중심적 임무는, 전국 각 민족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구축을 통해 ‘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中華民族主義라는 전래의 깃발을 다시 꺼내들고 장기집권을 합리화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여전히 중국 각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민족갈등을 봉합하면서 개별 민족지역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中華民族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그의 전체적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다.

시진핑은 왜 자기의 장기집권을 자축하는 축하의 장에서 굳이 中華民族主義라는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걸었을까. 이에는 먼저 탈냉전의 국제환경에서 민족주의라는 태풍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냉전이라는 팽팽한 이념적인 색깔이 지배하던 시대가 걸린 허허한 공간에 찾아든 것은 이념적 색채가 가장 희박한 민족주의였다, 탈냉전의 주인 없는 공간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색깔과 냄새가 희미하고 존재감 또한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민족주의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로 요청되었다. 냉전체제 해체 후에 찾아온 갖가지 세계사적인 문제에서 민족주의를 배제하고는 이를 설명할 수 없음은 바로 지금이 민족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임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이데올로기 부재’의 시대가 아닌 ‘민족주의의 전면적 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장기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에게도 中華民族主義의 기치를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구상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더욱이 체제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색깔을 손상치 않으면서 오늘의 중국을 포장하는 외양으로 민족주의가 상당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독재와 민주를 결합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민족자치와 민족통합을 증대하는 등 시급한 중국적 요청에도 효과적인 처방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번의 中華民族主義 강조는 전통적인 중국의 민족정책을 교묘하게 변용하고 왜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민족국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민족관계의 설정과 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민족정책의 정립이 중심적인 정치적 현안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라는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민족정책으로는 어디까지나 개별 민족들 간의 공존과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多元一體를 견지해 왔다. 이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민족국가이기는 하나, 그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분포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에도 기인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우선 그 수에 있어, 우세민족인 漢族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인 7-8%선을 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분포에 있어서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중국 전토의 거의 50%가까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 지역에 많은 수의 민족인구가 모여사는 것이 아니라, 넓게 분산된 생활(小集居,大分散)을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공존 모델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시진핑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시도하고 있는 민족정책의 변용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中華民族多元一體論’에서 ‘中華民族共同體論’이라는 논리로 이를 전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기존 민족정책과는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中華民族多元一體’이라는 1988년 費孝通(1910-2005년)에 의해 발표된 공식적인 민족관을 유지하면서 소수민족들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나마 공존관계로 유지 시켜 오고 있었다. 費는 漢族을 중심으로 중국 내의 56개 민족이 일체화한 것이 ‘中華民族’이며, 中華民族은 수천 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어 왔으나 19C 이래 열강들과의 경쟁 속에서 분명히 자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특징은 각 개별민족의 상위개념으로써 中華民族이 성립된 것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청말기에서 중화민국기에 걸쳐 중국의 내이션을 둘러싼 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관계의 설정은 지나친 개별민족 자립을 강조하다가 이 때문에 연방체제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한 소비에트연방과는 달리 다민족국가 중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장돼 왔다.

이렇듯 오랫동안 중국의 민족정책의 뿌리로 작동되어온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은 이번 제20차 당 대회를 통하여 ‘中華民族共同體論’이라는 새로운 민족정책의 목표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면서, 이 같은 민족정책의 변용을 통해 시진핑은 새로운 중국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의 중심적인

논리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방침은 당초 민족의 자결권, 분리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1921년 당 대회에서는 ‘自由聯邦制’를 통한 ‘中華聯邦共和國’ 구상이 채택되었다. 또 1931년의 江西省 瑞金에서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도 ‘중국 역내의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인정, 소수민족들이 단독국가를 만들든 중화소비에트연방에 가맹하든 혹은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역내에서 自治區域을 만들든 간에 이는 전적으로 소수민족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 그러나 이 같은 민족자결권의 승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화소비에트연방의 건설이라는 당의 기본방침은 전후 내전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사이에 전환됐다. 대전 직후부터 내몽골에서 내외 몽골의 통일을 요구하는 몽골 민족운동이 격화(외몽골에는 이미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이 성립), 또 1944년에 위글, 카자흐 족 등이 新疆의 伊寧을 중심으로 ‘동트루키스탄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등 터키계 무슬림 민족운동도 전쟁 전후로 커다란 확산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몽골 민족운동은 중국공산당 주도하에 결국 1947년 내몽골자치구인민정부의 성립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그 외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그 후 점차로 해소되는 가운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결국 내몽골자치구 설립이 선도적인 모델로 작용, 소수민족자치구 방식이 전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확산, 적용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으로 오늘의 중국에는 1급행정구로 5개의 自治區(내몽골, 新疆위글, 廣西 좡족, 寧夏 회족, 티베트)가 설치되고, 그 아래 2,3급 행정단위로, 30개의 自治州, 124의 自治현이 설치되어 있다. 거기에는 입법권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일정의 우대정책이 채택되어 왔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형식적이긴 하나 다민족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민족정책이 이번의 당대회를 통하여 시진핑에 의해 실질적인 다민족공존이 아닌 민족통합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中華民族共同體論’으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의미는 시진핑의 직접적 언명에서도 분명하다. 그는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을 만드는 것은 신시대 민족공작의 ‘綱’으로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은 국가통일의 기본이며, 민족단결의 본질이며, 정신역량의 ‘魂’이라 봤다. 그는 2022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제5회의 내몽고대표단과의 회합에서, ‘각 민족들의 단결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생명선이며 민족단결의 기본’이라고 강조까지 한다. 그는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의 주형은 신시대의 中華民族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민족관계의 공고, 발전, 평등단결, 상호 원조 호혜를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 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이는 신시대의 당의 민족정책의 근본으로, 이의 완전히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社會主義現代化國家全面建設’ 시기에는 일개 민족으로는 적어서 안 되고, 공동 부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본질적인 요구로 이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특징이라고

주장, 중국은 56개 민족 공동으로 전면 小康狀態를 달성, 소수민족과 민족지구등이 전국적으로 현대화의 기초설비 건설을 끝내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지구 발전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면적 사회주의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공동 투쟁하는 것은 신시대의 당의 민족 공작적 중요 임무로 각 민족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 공동투쟁,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中華民族共同體論’으로 정의된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공허한 민족공존책인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을 벗어던지고 이에 대신하여 실질적인 민족통합 즉 한민족으로의 민족융합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제2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第二次中央新疆工作座談會)’에서 처음으로 ‘中華民族共同體 의식’ 수립을 제안한 이래 여러 차례 “中華民族共同體意識” 공고화를 강조해왔고, 2018년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中華民族共同體의 식을 확실히 확립, 각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화를 강화, 각 민족이 석류알과 같이 다 같이 단결, 분투, 공동번영, 발전하도록 추진하자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민족정책의 대강을 民族多元論으로부터 민족단결론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2018년에 처음으로 ‘中華民族共同體論’은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포함돼 새로운 민족정책으로 확정,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대학, 학자들도 이의 이론화작업에 널리 동원되었다. 2020년 11월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은 ‘中華民族共同體意識鞏固化 연구센터(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研究基地)’를 설립한 이래 각 지역의 주요 대학에는 모두 ‘中華民族共同體 의식 공고화 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中華民族共同體意識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단결의 기초로 자리잡았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구체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中華民族共同體論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민족정책의 주요 내용인 ‘民族區域自治制’의 전면적인 폐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自治’를 강조하고 ‘통일’은 아주 적게 말했다. 소수민족자치권의 유지와 옹호를 강조하면서 소수민족들의 권익을 확보키 위해 어떻게 각 민족들이 대 中華民族과 국가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듯 中華民族多元一體論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민족구역자치는 어디까지나 소수민족들의 자치의 허용과 이를 통한 민족화합과 민족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에 반해 새로운 中華民族共同體論은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독자성을 더욱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더욱 이들 간의 긴장이 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신 중국성립 이래의 기존의 민족정책은 국가통일과 각 민족공동성의 강조가 비교적 적었고 현실적으로는 ‘民族區域自治制’로 구체화되어 왔었다. ‘中華民族은 중국 각 족의 총칭’으로 규정되어왔고, 이는 특정 시기의 소련의 민족이론을 답습한 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中華民族共同體論에서는 민족구역자치는 어떤 민족의 독자적 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민족의 독자적인 지방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각 민족 간의

혼거, 교류 등의 공동발전의 지역 공간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존의 民族區域自治制度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또 하나의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함의는 대만에 대한 흡수통합에 대한 의지다. 중국은 이미 홍콩과 마카오 등 주변 중화권에 대한 통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中華民族 통합의 대상이 바로 대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남은 中華民族 통합 대상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목표가 바로 中華民族共同體論 속에 내포 되어 있는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이미 대만에 대한 통합의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출시켜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통합의지의 명분적인 정책대안으로서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이밖에도 中華民族共同體論이 가지는 가장 분명하고 실질적인 명분은 漢族중심으로 중국의 민족관계를 확실하게 재편하려는 의지다, 중국이 다민족국가라고 하더라도 漢族과 여타 소수민족들과의 인구구성 비율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漢族의 점유비율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9할 이상이 漢族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中華民族共同體論의 강조는 겉으로는 中華民族共同體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漢族중심으로 다민족을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우선, 소수민족 신분을 폐지하고 漢族과 동등하게 중국 공민으로서의 법률적 대우를 받게 하려하고 또는 또 中華民族만을 ‘民族’(nation)으로 표기하고, 다른 소수민족은 ‘種族’(ethnic group)으로 표기하자고도 한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자치권,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학력고사 점수 가중치 부여 등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폐지하려하고, 동화정책의 일환으로는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漢語와 漢族史를 교육하고 민족종교를 탄압하고 있기도 하다. 中華民族共同體論의 이론가의 한사람인 후안강(胡鞍綱)은 각 민족의 신분을 취소하고 일체 된 ‘國族’ 개념의 中華民族共同體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마룽(馬戎) 베이징대 교수는 “21세기 중국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국가분열이다. 민족자결권 이론에 따르면 어떤 민족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할 권리를 부르짖던 소련은 이미 해체됐다. 민족자결은 해체를 부르는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수민족과 中華民族이 모두 民族(nation)으로 불러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56개 민족은 族群(ethnic)으로, 中華民族은 民族(nation)으로 부르자고 ‘숨겨진 漢族으로의 통합론’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듯 시진핑이 장기집권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中華民族共同體論’이 담고 있는 함의는 한마디로 본격적인 ‘大漢族主義’로의 민족정책의 대 선회로 이를 단순화할 수 있다. 신중국 성립이래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라고 하는 이른바 두 가지의 과도기적 경향을 극복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국민통합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중국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大漢族主義’로의 민족통합 이상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는 또 현재의 중국에서의 민족적 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소수민족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성립 이래 꾸준히 이어져온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漢族化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내어 현재 남아 있는 소수민족들에 의한 불안 요소는 정권유지에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大漢族主義’의 강화를 통한 ‘地方民族主義’의 제거라는 즉 漢族 중심의 민족통일이라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중국의 내심을 주저없이 표면화하면서 강력한 漢族 중심의 민족통합적 민족공동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多民族共存’이라는 형식논리를 버리고 漢族 중심의 ‘中華民族共同體’라는 실제적인 민족통합체를 내걸면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漢族 중심주의’의 깃발을 내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다원성의 상징이었던 國旗인 ‘五星紅旗’는 이제 단일성을 상징하는 ‘一星紅旗’로 그 내용을 바꿔가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선택은 그만큼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의 위태로운 도전이기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진핑보다는 민족의 힘이 보다 크고 영원함은 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